

헌 법

문 1. 헌법개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1960년 6월 15일의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헌법 제1조, 제2조, 제7조의2의 규정을 개폐할 수 없다고 하였다
- ②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 헌법상으로는 과연 어떤 규정이 헌법핵 내지는 헌법제정규범으로서의 상위규범이고 어떤 규정이 단순한 헌법개정규범으로서의 하위규범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아니하다
- ③ Th. Maunz는 완성된 사실이론(fait accompli)과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주장하며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인하였다
- ④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⑤ 헌법개정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문 2. 국적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인 자는 그 父 또는 母가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② 출생하기 전에 父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 父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③ 외국인인 父와 대한민국 국민인 母 사이의 혼인의 출생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 ⑤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3. 우리나라의 정당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제헌헌법 이래 헌법위원회,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정당이 해산된 것은 제1공화국 시절의 진보당 해산이 유일한 사례이다
- ②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 취소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 잔여재산은 원칙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 ③ 정당은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될 수도 있고,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④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 ⑤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부할 수 있다

문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민투표제는 제2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에 관한 경우에 한정되었다
- ②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훼손)금지의 규정을 처음으로 든 것은 제3공화국(1962년)헌법이다
- ③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국민발안제를 명문으로 규정한 것은 제2차 개정헌법(제98조)부터 제3공화국(1962년)헌법까지이다
- ④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제3공화국(1962년)헌법에서 처음 규정되어 현행 헌법에까지 이르고 있다
- ⑤ 제헌헌법은 부통령과 국무총리를 모두 두었고, 제2차 개정헌법은 이중 국무총리를 폐지하였다

문 5. 사회국가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및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우리 헌법은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사회국가 원리를 수용하여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아울러 달성하려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 ② 국민건강보험에 있어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 ③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헌법재판에 있어서 일정한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 작용한다
- ④ 국가의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단순히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한다
- 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일부 토지소유자에게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하여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

문 6. 제도적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서로 중복적으로 보장될 수 없다
- ② 제도적 보장이 침해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관련 개인은 그 침해를 이유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③ 제도적 보장은 객관적 제도를 법률에 규정하여 당해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입법권자가 특히 중요하고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가제도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법발전, 범형성의 방침과 범주를 미리 규율하려는 것이다
- ④ 제도적 보장 규정은 프로그램규정이므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할 수 없다
- ⑤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법률로써 그 제도의 내용을 자유로이 형성할 수 있다

문 7. 기본권의 주체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국가(또는 국가기관, 국가조직의 일부나 공법인)는 기본권의 수범자일뿐, 기본권의 주체로서 그 소지자가 아닌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기본권의 실현을 위하여서는 그 예외를 제도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회 노동위원회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 ② 서울대학교는 공권력행사의 주체인 동시에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는 기본권의 주체이다
- ③ 법인에 대하여 인격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한 바 있다
- ④ 영화법 제12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대표자의 정함이 있고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법인 아닌 사단 자체의 기본권주체성을 인정하였다
- ⑤ 정당은 선거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문 8.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의 보장은 공권력의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기본권의 공동화를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 ② 기본권의 본질적인 핵심, 최소한의 내용을 보장한다는 절대설은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점에 대하여 일치하고 있다
- ③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상대설은 이를 비례원칙의 다른 표현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 ④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와 관련하여, 입법자가 형성의 자유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가는 비례의 원칙에 의하여 판단하게 된다
- 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에서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문 9. 행복추구권 내지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관하여 내린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 ①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 즉 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 ② 구 국가보안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제대상이 되는 편의제공은, 법운영당국이 편의제공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규문언 그대로 적용하여 합헌행위까지도 처벌할 경우, 헌법 제10조 소정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 ③ 주세법 제38조의7 등이 규정한 구입명령제도는 소주판매업자에게 자도소주의 구입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소주제조업자의 기업의 자유 및 경쟁의 자유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약함으로써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도 제한하고 있다
- ④ 기부금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그 규정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도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 모집목적에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 ⑤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의무화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 것이다

문 10.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평등권과 조화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 사안은?

- ① 사립학교 교원을 근로3권의 행사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
- ② 1980년도 해직 공무원의 특별채용시에 5급이상과 6급이하를 차별해서 5급이상 공무원을 특별채용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
- ③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에 항고하기 위해서는 담보로서 경락대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현금 등을 미리 공탁하도록 하는 것
- ④ 초·중등학교 교원에게는 교육위원직 겸직을 금지하면서 대학교원에게는 겸직을 허용하는 것
- ⑤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소액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을 정함에 있어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을 광역시 내의 다른 지역과 달리 취급하는 것

문 11. 헌법규정과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ㄴ.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ㄷ.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국회·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ㄹ.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 ㅁ. 공무원인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ㅂ.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 그리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ㅅ.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ㅅ
- ③ ㄴ, ㅅ
- ④ ㄴ, ㄷ, ㅁ, ㅅ
- ⑤ ㄹ, ㅅ

문 12.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in dubio pro reo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 ② 범죄사실의 입증책임은 기소자측에 있고 피고인 스스로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 ③ 공소제기된 형사피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지 공소제기조차 되지 아니한 형사피의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④ 공소의 제기가 있는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된다
- ⑤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면 당해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에 반한다

문 1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2조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른 것은?

- ① 당해 사건의 항소심 절차에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되었는데도 이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한 자가, 또 다시 동일한 항소심 절차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고 그것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반된다
- ② 다수의견은 집시법 제2조 제2호의 시위에는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장소적 제한개념이 모든 시위개념에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았다
- ③ 다수의견은 집시법 제2조 제1호가 옥외집회의 정의규정에 장소적 제한개념을 추가하지 아니한 것이 옥외집회의 개념을 너무 넓게 규정하여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④ 다수의견은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고,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시법 제10조가 야간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 옥외집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다
- ⑤ 반대의견 중 일부는 옥외집회의 개념에 장소적 제한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문 14.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그 조항 자체로 공무원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②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개인이 국가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서 그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의 제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③ 헌법재판소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 ④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일반국민이 직무집행 중인 군인과의 공동불법행위로 직무집행중인 다른 군인에게 공상을 입혀 그 피해자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인 군인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달성되는 공익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치러야 하는 수고나 시간의 소모를 비교하여 볼 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문 15.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에서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 ③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행정소송에서 재판장은 재판의 대상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입증한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문 16. 학문의 자유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법원은, 학문연구가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 이는 이미 학문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졸업논문 작성 등 학문연구의 자료로서 공산주의 경제이론에 관한 서적을 취득·보관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로서 용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 ② 우리 헌법이 학문의 자유를 규정한 제22조 제1항과 별개로 제31조 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대학자치제는 기본권과는 무관한 제도적 보장으로서만 이해된다
- ③ 교수의 신분과 관련하여 정년보장제를 채택하든 기간임용제를 채택하든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④ 초·중·고교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보통교육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수학권에 의한 제약하에 있으므로 수업의 자유를 내세워 자신의 연구결과를 학생들에게 여과없이 함부로 전파할 수는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⑤ 학문연구 결과의 발표는 그 사회적 전파성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국가적 제한에 따른다

문 17. 재산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 취지와 가장 잘 맞는 것은?

- ①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퇴역연금수급권은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토지수용법 소정의 환매권은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으로 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이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그 실질이 사법상 매매이므로 그 법에 정한 환매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 ③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국회에서 제정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은 재산권 형성적 법률유보에 의하여 실현되고 구체화된다
- ④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경우에 보상을 지급하는 법률을 제정하지 아니한 것은 헌법의 명시적 입법 위임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입법 부작위 중 진정입법부작위라고 할 수 있다
- ⑤ 헌법 제23조 제1항은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련입법에 대하여는 과잉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18. 직업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담배 자판기 설치의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하여 담배소매인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다 소 제한되더라도 법익형량의 원리상 감수되어야 한다
- ② 자동차등록신청대행업무를 일반행정사 이외의 자동차매매업자 및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도 중첩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일반행정사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위헌이다
- ③ 안경사의 안경조제행위 및 그 전제가 되는 도수측정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안과의사의 의료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 ④ 직업의 자유는 자유경쟁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 ⑤ 다단계판매에서 가입자가 직접 행한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이외에 다른 가입자의 영역활동에 의하여 상위 가입자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문 19. 노동 3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초·중등교원의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에 한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공익사업의 경우에 허용되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강제중재제도를 합헌이라고 보았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서만 근로3권을 보장하고 그 이외의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근로3권의 행사를 제한함으로써 일반근로자 또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헌이다
- ④ 헌법재판소는 노동위원회의 미확정의 구체명령에 대하여까지 그 위반 행위를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을 위헌이라고 하였다
- ⑤ 주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 혹은 생산과정상 그와 긴밀한 연계성이 인정되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쟁의권을 부인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문 20. 재판청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서 위헌성이 확인된 것은?

- ①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정된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
- ②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한 것
- ③ 징계를 받은 변호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하도록 한 것
- ④ 관세법 소정의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
- ⑤ 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제도

문 21. 의사정족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국회 본회의의 의사정족수에 관하여 헌법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② 국회법상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③ 국회법상 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출석이다
- ④ 지방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⑤ 의사정족수는 의사의 진행을 위하여 항상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개최 및 폐회시에만 충족되면 된다

- 문 22. 국회의 의사원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표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의사공개 원칙은 본회의에만 적용된다
 - 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문 23. 국회법상의 전원위원회(全院委員會)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全員)으로 구성한다
 - ②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은 1인으로서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으로 한다
 - ③ 국회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자적으로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국회는 주요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전원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⑤ 전원위원회는 주요의안의 본회의 상정 전 이외에 본회의 상정 후에도 개최할 수 있다

- 문 24. 재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현행 헌법은 예산과 법률을 형식적으로 구별하지 아니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취하고 있다
 - ②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 행사와 같이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국회에 환송하여 재심을 요구하는 등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의 폐지·삭제·감액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④ 예비비에 대하여는 국회의 의결을 얻었기 때문에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 대법원의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대법원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 문 25. 대통령선거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목요일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 ②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함이 원칙이다
 - ③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일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⑤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이어서 국회가 당선인을 결정한 경우 국회의장은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그 당선을 공고한다

- 문 26. 대통령이 임명권자인 경우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법관, 검사, 감사위원
 - ② 감사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 ③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 ④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사법연수원장
 - 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 문 27.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이 사망한 경우는 헌법 제71조의 궐위에 해당한다

- ② 국회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함으로써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 경우는 헌법 제71조의 사고에 해당한다
- ③ 대통령의 궐위시 헌법 제71조에 의한 권한대행자의 직무범위는 대통령의 권한 전반에 걸치는 것이 원칙인바, 그 대행은 반드시 현상유지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
- ④ 대통령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 대통령이 정신장애 등으로 권한대행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확인하고 선언한다
- ⑤ 제2공화국(1960년)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궐위시 제1순위 권한대행자는 참의원의장이었다

- 문 28. 위임명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 ① 군형법 제47조가 명령위반죄의 구성요건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명령에 위임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
 - ② 부령의 제정·개정절차가 대통령령에 비하여 보다 용이한 점을 고려할 때, 대통령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령에 재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위임조항 자체에서 위임의 구체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당해 법률의 전반적 체계와 관련규정에 비추어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객관적으로 분명히 확정할 수 있다면 이를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백지위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④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라고 함은,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에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 ⑤ 위임입법에 대한 구체성 내지 예측가능성의 요구 정도는 규제대상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특히 처벌법규에서는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 문 29. 국무총리·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와 해임건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와 해임건의가 모두 가능하다
 - ② 탄핵소추의결이나 해임건의의 모두 국회의 재량행위이다
 - ③ 탄핵이 결정되면 공직으로부터 파면되나, 해임건의가 의결된 경우 그 구속력에 대한 헌법규정은 없다
 - ④ 탄핵결정을 받은 자와 해임건의가 받아들여져 해임된 자는 모두 5년간 공직취임이 금지된다
 - ⑤ 탄핵 및 해임건의의 발의·의결에는 모두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 문 30. 감사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은 조직상으로는 대통령에 소속되나, 그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②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감사원장의 사고시에는 감사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③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대하여 감찰권이 있으나,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공무원은 그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④ 헌법 제98조 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 ⑤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문 31. 지방자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두고 있다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 ③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침해 문제와 더불어 그 주민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이다
- 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한다

문 32. 위헌법률심판제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급 법원은 직권에 의한 제청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제청결정도 할 수 있으나, 제청할 권한은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의 권한이므로 형사피고인 등 당사자는 직접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없다
- ②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권 중에 법률의 합헌결정권이 포함되는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 ③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인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규범까지 포함한다
- ④ 당사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에서의 재판개념에는 검사의 영장발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포함된다

문 33. 헌법소원심판에 관하여 바르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은?

- ①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에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다
- ③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목정정신청을 반려한 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인 공권력행사에 해당한다
- ④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 침해된 기본권이 일신전속적 성격을 지니고 이에 관련된 심판절차가 수계될 성질이 못되는 경우에는 사망과 동시에 심판절차는 종료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 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당해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문 34.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임명에는 모두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 ② 대법원장 및 대법관은 모두 중임할 수 없다
- ③ 헌법상 특별법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대법원은 헌법상 규칙제정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갖는다
- ⑤ 법관은 탄핵, 금고 이상의 형벌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당하지 아니한다

문 35.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고소인은 물론 피의자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된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의 대상이 된 피의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 ③ 위증죄는 비록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아니지만, 검사가 위증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당사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고소 사실에 대한 1차 불기소처분이 있는 후 검찰청법상의 항고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다시 고소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2차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검찰청법상의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2차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 ⑤ 피의사실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고소를 제기한 바 없는 피해자는 검찰청법에 정한 항고, 재항고를 제기하지 않아도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6.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를 열거조항으로 보는 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더라도 이는 국회 내부의 권한 다툼으로서 국회 내의 일부 기관인 국회의원의 당사자 능력은 인정될 수 없다
- ②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국가기관을 판별하는 데는 당해 국가기관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되고 헌법과 법률에 의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다
- ③ 국가기관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 제1항 제1호는 예시적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1997. 7. 16. 결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이었다
- ④ 1998년 대통령의 국무총리서리임명과 관련한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사건에서 헌법재판소 다수 재판관의 의견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된 경우 일정수 이상의 소수 의원이나 소수 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에게만 국회를 위한 제3자 소송담당이 허용된다고 보았다
- 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관장하는 기관소송의 경우 의회의 원내교섭단체에게 당사자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문 37.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 ① 한정합헌결정도 위헌결정의 일종이므로 형사법률에 관하여 한정합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허용된다
- ② 헌법재판소가 법률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개선입법의 소급적용을 명하였음에도 법원이 개선입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한 경우, 그 재판은 예외없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소급효가 인정되는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의 범위는 실제적인 형벌법규에 한정하여야 하고 형사소송절차에 관한 절차법적인 법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 조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위헌결정을 위한 계기를 부여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제청을 하였거나 위헌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위헌제청 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한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 ⑤ 위헌법률을 적용한 판결은 비록 형식적으로 확정되더라도 기관력이 인정될 수 없다

문 38.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가장 다른 것은?

- ① 위헌여부심판이 제청된 법률조항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이 중요하여 그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의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성이 있는데도 그 해명이 없는 경우에는 설사 심리기간 중 사태 진행으로 소의 이익이 소멸된 경우에도 제청 당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한 그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
-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서 당해 사건이 교육청의 무인가교육기관 폐쇄명령처분을 다투는 것인 경우 폐쇄명령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 ④ 재심사유가 없음에도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어떤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법원의 위헌심판제청은 적법하다
- ⑤ 민사소송법 제368조의2에 따라 제청법원 또는 그 재판장이 하고자 하는 인지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은 본안판결의 주문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문 39.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할 때, 진정소급효의 입법으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
-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 ③ 시혜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④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 ⑤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문 40. 기본권의 경합(또는 경쟁)과 충돌(또는 상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의도 및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객관적인 동기 등을 참작하여 사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그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이다
- ② 두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 ③ 조각가가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절취한 행위를 재산권과 예술의 자유의 충돌로 인정할 수는 없다
- ④ 예술적 표현수단을 사용하여 상업적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자유, 재산권, 예술의 자유 등 복합적인 기본권 충돌이 발생한다
- ⑤ 언론보도에 대한 반론권을 인정할 경우, 이는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에 실제적 조화를 추구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 법

문 1. 입양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양자가 될 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③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양친이 될 자와 兄弟行列에 있는 자는 양자가 될 수 없다
- ⑤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惡疾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문 2. 인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父는 자가 타인의 친생자의 추정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②父는 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성년자이거나 불문하고 인지할 수 있다
- ③父가 妻과의 사이의子を 妻와의 혼인중의子로 출생신고를 하면 혼인중의 자로 되지는 않으나 인지의 효력은 있다
- ④父는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인지할 수 있다
- ⑤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인지할 수 있다

문 3.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살아서 돌아온 경우에 그 자가 형성한 새로운 법률관계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없더라도 유효하다
- ② 부재자와 사실상의 동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③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개시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실종선고의 취소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⑤ 甲에 대한 실종선고로 선의의子인 乙이 1천만원을 상속받아 자신의 노력으로 이 돈을 3천만원으로 증식하였는데, 그 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乙은 1천만원을 반환하면 된다

문 4.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사실상의 부가 사망한 후 혼인외의 자가 법원의 인지심판 확정에 의하여 그 사실상의 부의 호적에 입적한 경우 그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②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참칭 상속인이 상속개시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다
- ③ 민법 제1014조에 의하여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가액청구권은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다
- ④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권의 침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소멸한다
- 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재산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할 수 있다

문 5. 상속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유하지만 개개의 재산에 대한 지분은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 ② 사실혼의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에 속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재산증가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기여분은 유류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기여분을 갖는 자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상속분을 양수한 제3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을 대위하여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분할의 소급효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6. 무효인 신분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위조서류에 의한 혼인신고가 된 후 피위조자가 위조자와 몇 차례의 육체관계를 맺은 것만으로는 무효인 혼인의 추인으로 볼 수 없다
- ② 입양의 의사로 생후 3개월된 棄兒를 출생신고하였고 당시 부모나 후견인 등의 代諾등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라도 양자가 15세가 된 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양친이 사망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입양을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민법 제139조는 신분행위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 ④ 무효인 신고행위에 상응하는 신분관계가 실질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고 그럴 가망도 없다면 그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신고행위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 ⑤ 협의이혼을 한 후 배우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면서 혼인생활을 계속 하였다더라도 무효인 혼인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 7. 일상가사행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처가 외국에 체류하는 별거중인 夫의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일상가사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처가 부담한 채무채무는 혼인공동체의 통상의 사무에 포함되는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로 보기 어렵다
- ③ 처가 교회에의 건축 헌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행위는 일상가사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처가 자가용구입자금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일상가사 행위라고 할 수 없다
- ⑤ 처가 주택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행위는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상가사 행위로 보기 어렵다

문 8. 대습상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재대습상속도 인정된다
- ② 대습상속은 피대습자의 상속권을 대위 또는 승계하는 것이다
- ③ 대습상속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될 경우에 한하여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인정된다
- ④ 태아는 대습상속권이 없다
- ⑤ 상속인에게 상속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권은 부인된다

문 9. 부양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가사소송법은 요부양자를 신속히 구호하기 위하여 부양이행의 심판전이라도 부양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가압류와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② 과거의 부양료청구에 대하여 학설은 긍정하나 판례는 아직 부정적이다
- ③ 부양의무 없는 제3자가 부양을 필요로 하는 자를 부양하였다도 부양의무자에게 이를 구상할 수 없다
- ④ 자기가 사는 권리가 다른 사람을 부양할 의무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1차적 부양의무에도 적용된다
- ⑤ 부부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10. 甲의 아들 乙은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甲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한 후에도 이를 번복하여 추인할 수 있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丙은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더라도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판례에 의하면,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에 乙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않은 때에는 甲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甲의 추인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乙의 행위는 처음부터 유권 대리행위였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한다

문 11. 복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한다
- ② 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
- ③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 ④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 ⑤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범위는 법정대리인이 임의대리인에 비해 넓다

문 12.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 ②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다
- ③ 법인의제설에 의하면 이사는 본질상 대리인과 같다
- ④ 법인의 이사는 자연인에 한한다
- ⑤ 이른바 사원의 고유권은 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총회의 결의로도 박탈할 수 없다

문 13.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소송행위는 내심의 의사보다 표시를 기준으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 ②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위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은 양도인에게 있다
- ③ 재단법인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해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도 출연자는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므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 ⑤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채권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이 위 대출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착오로 신용보증기금에게 신용보증서 담보설정 해지를 통지한 경우, 그 해지의 의사표시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문 14.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분묘가 존재하는 한 존속한다
-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③ 암장이나 평장 또는 시신이 안장되지 않은 봉분으로는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 ④ 분묘기지권은 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소멸하며, 점유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법령상의 분묘면적 제한을 초과할 수 없다

문 15.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지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②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임치계약에 있어서 임치물의 반환 청구권은 계약성립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③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의 기한도래에 대한 지·부지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된다
- ⑤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부착된 채권의 경우에도 그 이행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문 16. 미성년자 A가 자신의 물건을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B에게 매도하고 B는 다시 C에게 매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이라면 C가 선의라도 A는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 ②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매매목적물이 동산이고 C가 선의취득하였다면 C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③ B가 계약 당시에 A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B는 A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④ A가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그 의사표시는 C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⑤ A가 B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A가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 C는 B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문 17.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동일하다
- ②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 있어서는 계약 내용에 따른 채무불이행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③ 양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하여야 할 협력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러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 ④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⑤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거나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 된다

문 18. 甲에 대해 1백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乙은 그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丙으로부터 80만원을 꾸었다. 권리질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丙의 권리질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丙이 甲에 대하여 그 채권의 입질을 통지해야 한다
- ② 권리질권의 설정으로 乙은 甲에 대한 채권을 상실하게 된다
- ③ 乙이 甲에게 채무면제를 해 주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
- ④ 권리질권자인 丙은 乙의 변제행위가 있어야만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 ⑤ 권리질권자인 丙은 양채권이 모두 변제기가 도래하면 甲에 대하여 직접 80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문 19. 다음 중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① 무능력자 본인
- ②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 ③ 제3자의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 ④ 취소권 있는 회사를 합병한 회사
- ⑤ 대리인이 행한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있어 그 대리인

문 20.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음 중 그 제3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 ① 가장금전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의 양수인
- ②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가장포기가 있을 후 그 부동산을 부담 없는 상태로 양도받은 자
- ③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 ④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 ⑤ 가장매매에 기한 부동산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전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자

문 21. 점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②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다
-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 경과 후 매수의사를 표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다
- ④ 점유계속의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의 승계가 입증된다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 ⑤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가 결정된다

문 22.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차권이登記되지 않았더라도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② 주택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보다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 ④ 주택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재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함으로써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적이거나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면 그 전출 당시 대항요건을 상실함으로써 대항력은 소멸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임차인이 그 일부를 임차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번뿐만 아니라 호수까지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2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판례는 등기가 있으면 등기원인이 진정하고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행하여졌다는 점이 추정된다고 한다
- ② 판례는 전 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불명으로 기재된 멸실회복등기도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③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권리변동의 당사자에게도 미친다고 한다
- ④ 판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 ⑤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등기내용에 대한 악의가 추정된다

문 24. 주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되어 독립성을 상실한다
-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라야 하고 당사자간의 반대 특약은 무효이다
- ③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용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 ④ 종물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될 수 없다
-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의 종물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문 25. 다음 중 판례에 의할 때 등기를 요하는 것은?

- ① 출연자와 재단법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출연 부동산 소유권의 재단법인에의 귀속
- ② 해제조건의 성취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 ③ 국유임야의 불하에 의한 소유권 취득
- ④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의 복귀
- ⑤ 법정지상권 있는 건물 경락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문 26. 유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의 점유 전에 관련되는 채권이 발생하고 후에 그 물건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 ②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 ③ 간접점유자도 유치권자가 될 수 있다
- ④ 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으로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문 27.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에는 중복등기여서 무효로 되는 등기도 포함된다
-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앞서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동안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된다
- ③ 선의점유는 추정되므로 다투는 자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점유자의 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⑤ 점유자의 무과실은 점유개시시점에만 요구된다

문 28.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린관계에서 발생하는 상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 지역권에 있어서 요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일 수 없으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의 일부이어도 된다
- ③ 판례는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건물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 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하였다고 본다
- ④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려면 토지 상하의 범위를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 ⑤ 1개의 부동산의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는 후순위권리자 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문 29.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데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 ③ 혼인관계가 존속중인 사실을 알면서 남의 첩이 되어 부첩행위를 계속한 경우에는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래의 부첩관계의 사전승인이라는 것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행위이므로 본처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어떠한 급부를 할 것을 약정한 경우, 그 급부가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여비, 일실손해 등을 초과하는 것일지라도 급부약정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 ⑤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 그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매도인측의 경솔·무경험은 그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고, 궁박상태는 매도인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문 30.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
- ②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에 있어서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도 알았어야 한다
- ③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 ④ 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나, 예외적으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 ⑤ 특정 채권자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백지근저당설정계약서 등을 교부할 당시에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으나 교부받은 자가 이를 보충할 당시에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면 그 담보제공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문 31. 매매계약의 이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②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채무의 이행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이고 계약비용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 ④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 성립 당시에 목적물이 있었던 장소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로 된다
-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있어 매수인이 매수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2. 변제의 제공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면 예금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채권에 대한 변제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좇은 현실의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 ②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면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가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 ③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나 자기 채무의 이행의 제공이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최소한 위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고 그 뜻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 잔금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은 요한다
- ⑤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다른 한편 어음상의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된다

문 33.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변제기 전의 변제라 하더라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한 경우라도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④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 때로부터 약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 ⑤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판결 선고시로부터 약의 수익자로서의 지위에 있게 된다

문 34.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문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책임능력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자동차운행자는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 ② 판례는 호의동승자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 ③ 판례는 사고의 직접 피해자에게 중대한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도 손해배상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 ④ 화물트럭을 정차시키고 하적작업을 하던 중 인부가 화물칸으로부터 짐을 부주의하게 내던지는 바람에 지나가던 사람이 이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하는 차량의 운행으로 말미암아라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문 35.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경우는 물론 특유재산의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도 분할대상이 된다
- ②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된다

- ③ 아직 수령하지 않은 퇴직금도 퇴직일과 그 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④ 부부일방이 혼인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문 36.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행위 이후에도 가능하나 그 경우 대항력에 소급효는 없다
- ② 채권양도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로 양도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고 使者를 통하여 하거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도 있다
- ③ 민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 및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도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④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통지된 경우에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에 붙여진 확정일자 of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⑤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문 37.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탁보증에 있어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하고도 보증인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보증인이 사전통지 없이 이중의 면책행위를 한 경우, 판례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 ② 과실 없이 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할 재판을 받은 때에는 수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3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3천만원의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채권자는 각 보증인에게 1천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수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한 경우에 주채무자는 배상할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그 배상의무를 면할 수 있다
- ⑤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주채무자는 그러한 보증인에게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문 38. 계약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계약인수이다
- ②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 ⑤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자신들의 대여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신설 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회사가 분양계약에 따라 피분양자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채무의 이행뿐만 아니라 잔대금채권까지도 함께 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는 분양계약의 분양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계약인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39. 표현대리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다른 사람이 권한 없이 직접 본인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여 어음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그 타인에게 그와 같은 어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고 본인에게 책임을 질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안전을 위하여 표현대리에 있어서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②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특정된 영업이나 특정된 사항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영업주가 책임을 지는가의 판단은 민법상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의한다
- ③ 담보권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가 자기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어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된다
- ④ 본인이 타인에게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본인에 의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문 40. 연대채무자 1인에게 생긴 사유 중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 ① 법률행위의 취소
- ② 이행청구
- ③ 更改
- ④ 면제
- ⑤ 소멸시효

형 법

문 1.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미국인이 미국 내에서 한국인으로부터 주미한국대사관 영사에게 알선해 달라는 전화부탁을 받고 한국에 입국한 다음 그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변호사법위반죄를 범한 경우 대한민국의 변호사법이 적용된다
- ② 영국인이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공모만하고 홍콩에서 중국인으로부터 히로뽕을 매수한 경우 그 영국인에게 대한민국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한국인이 한국 내에 있는 미국 문화원에서 방화죄를 범한 경우, 미국 문화원이 국제협정이나 관행에 의하여 치외법권 지역이고 미국본토의 연장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 ④ 중국인이 중국에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경우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된다
- ⑤ 독일인이 독일에서 한국인 기혼여성과 간통한 경우 그 독일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 2. 계속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연속범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 ② 범죄단체조직죄는 계속범이다
- ③ 기수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 ④ 부작위범은 모두 계속범이다
- ⑤ 기수 이후에도 공범가담이 가능하다

문 3. 다음의 사례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이 甲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승용차로 乙을 가로막아 강제로 차에 태운 후 乙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달리다가 탈출하려던 乙이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 ② 甲이 丙을 乙로 오인하고 丙에게 타격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③ 甲이 방화한 집안으로 乙이 가재도구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불길에 휩싸여 乙이 사망한 경우
- ④ 甲이 수영을 전혀 못하는 乙을 익사시키기 위하여 다리 위에서 강물로 밀었는데 乙이 교각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경우
- ⑤ 甲과 乙이 의사연락 없이 각자 丙을 폭행하여 丙이 상해를 입었으나 그 원인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

문 4. 결과적 가중범의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①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없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 ② 야간에 흉기로 공무집행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상해)위반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된다
- ③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심하게 때려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④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져 사망하게 한 경우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 ⑤ 샷대질을 하면서 다그치자 이를 피하려고 뒷걸음치던 피해자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두개골절로 사망한 경우 폭행(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문 16. 공동정범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상호 의사의 연락하에 상해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누구의 행위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독립행위의 경합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③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 ④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그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⑤ 범인 전원이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모의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범행계획에 대한 연락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문 17. 불가별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람을 살해한 후 그 사체를 유기하는 행위
- ② 예금통장을 강취한 후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 ③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
- ④ 장물보관을 의뢰받고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 ⑤ 대마를 절취한 후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문 18. 甲과 乙은 골동품상 丙의 집에 침입하여 甲이 골동품을 훔치는 동안 乙은 현관 앞에서 망을 보았다. 甲이 골동품을 훔쳐 나오자 대기하고 있던 乙은 甲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도주하였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甲, 乙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이다
- ② 甲은 주거침입절도죄, 乙은 장물운반죄 및 도주원조죄이다
- ③ 甲은 특수절도죄, 乙은 도주원조죄이다
- ④ 甲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의 정범이고, 乙은 甲의 범죄에 대한 방조범이다
- ⑤ 甲은 주거침입죄 및 특수절도죄의 정범이고, 乙은 주거침입죄의 정범이고 절도죄의 방조범이다

문 19. 甲을 강도상해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귀금속을 훔치려고 乙이 망을 보는 사이에 낮에 담을 넘어 주거에 침입하여 현관문 쪽으로 가는 순간 주인에게 발각되어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甲이 주인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 ② 甲이 현금을 훔치려고 야간에 남의 집 담을 넘어 마당에 내려서는 순간 개 짖는 소리에 놀라 대문을 나오다가 순찰중인 의경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의경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경우
- ③ 甲이 물건을 훔치려고 야간에 아파트 시정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려는 순간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④ 甲이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 대한 외상물품 대금채권의 회수를 의뢰받고 야간에 채무자를 산으로 불러내 칼로 찌르고 몽둥이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채권을 추심한 경우
- ⑤ 甲이 낮에 버스 안에서 乙이 바람잡는 사이에 소매치기를 한 후 발각되어 황급히 버스에서 내려 도망가려는 순간 피해자가 추격하자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乙이 피해자를 그 버스 밑으로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경우

문 20. 판례에 의할 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 ① 선박에 사람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선박을 매몰시켰으나 매몰순간 사람이 선박을 떠난 경우(선박매몰죄의 기수범)
- ② 경찰서 조사과장이 甲의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기 위하여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甲에 대한 음주운전자적발보고서를 찢어버린 경우(공용서류손상죄)
- ③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물에 불을 놓아 사망하게 한 경우(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④ 입찰장소 주변을 에워싸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아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들을 참석하지 못하게 한 경우(입찰방해죄)
- ⑤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음화반포등죄)

문 21. 甲은 자신의 아버지인 乙을 모르고 아버지 A를 친구 乙과 함께 살해하였다. 그러나 친구 乙은 범행 당시 A가 甲의 아버지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甲은 존속살해죄, 乙은 보통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 ② 甲, 乙 모두 보통살인죄로 처벌
- ③ 甲, 乙 모두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 ④ 甲은 보통살인죄, 乙은 존속살해죄로 처벌
- ⑤ 甲은 존속살해교사죄, 乙은 존속살해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

문 22. 甲은 乙에게 丙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교사했으나 이를 승낙한 乙은 丙을 살해하였다. 甲의 형사책임은?

- ① 살인교사죄
- ② 절도미수죄의 교사범
- ③ 살인예비죄
- ④ 절도교사죄
- ⑤ 무죄

문 23. 판례에 의할때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ㄱ. 형법을 제정하면서 제243조 음화반포죄의 구성요건에 '음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 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동시에 명한 경우
- ㄷ.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2조의 '지수'를 범행 발각 전에 지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한 경우
- ㄹ. 초병이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총기를 편취당한 경우도 군용물분실죄(군형법 제74조)의 '분실'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경우

- ① 0 개
- ② 1 개
- ③ 2 개
- ④ 3 개
- ⑤ 4 개

문 24. 건설담당부서 공무원 甲은 건설업자 乙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1천만원을 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甲은 뇌물로 받은 현금 가운데 8백만원은 소비하였다. 그 후 문제가 되자 甲은 뇌물로 받은 돈 가운데 남은 그 돈 2백만원과 은행에서 차용한 돈 3백만원을 합한 5백만원을 乙에게 반환하였다. 甲과 乙이 뇌물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甲으로부터 추정할 금액은?

- ① 500만원
- ② 600만원
- ③ 800만원
- ④ 900만원
- ⑤ 1000만원

- 문 25. 친족상도례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소유자와의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해당된다
 - ② 공갈죄의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 야간에 공갈이 이루어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친족상도례는 행위자가 범행당시에 객관적인 친족관계의 존부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④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 ⑤ 범행 당시에는 친족관계가 없다가 범행 후에 비로소 인지가 되었다면 인지에 기하여 형성된 친족관계에 따라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 문 26.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 채권에 기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한 경우
 - ② 채권이 소멸된 판결정본이나 원인관계가 소멸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한 경우
 - ③ 수표발행인이 허위의 분실사유로 공시최고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채권판결을 받아 수표상의 채무를 면한 경우
 - ④ 여관건물이 경매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고 임대하여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 ⑤ 음식점 주인이 한우만을 취급하는 것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수입쇠고기를 판매한 경우
- 문 27. 죄수관계가 다른 하나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의 문서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의 명의를 위조한 경우에 각 사문서위조죄
 - ② 슈퍼마켓에서 손님을 협박하여 내쫓은 경우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
 - ③ 운전면허가 없는 자가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에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과 주취운전의 죄
 - ④ 강도범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 ⑤ 강도가 재물강취에 실패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한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으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에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
- 문 28. 임신한 甲(女)은 태아가 딸임을 알게 되자 산부인과 의사인 乙에게 부탁하여 낙태수술을 받았다. 甲과 乙의 죄책은?
- ① 甲,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의 공동정범
 - ②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 ③ 甲은 자기낙태죄, 乙은 무죄
 - ④ 甲, 乙은 자기낙태죄의 공동정범
 - ⑤ 甲은 무죄, 乙은 업무상 동의낙태죄
- 문 29. 甲은 A를 여관으로 납치하여 감금한 후 그의 친구 乙을 불러 내어 함께 A를 교대로 감시하면서 구타하였다. 甲과 乙의 형법상 책임은?
- ① 甲과 乙은 중감금죄의 공동정범
 - ② 甲은 감금죄와 폭행죄의 실체적 경합범, 乙은 폭행죄
 - ③ 甲과 乙은 공동정범으로서 감금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④ 甲은 감금죄만 성립하며 폭행죄는 불가벌적 수반행위, 乙은 폭행죄
 - ⑤ 甲은 감금죄와 폭행죄의 상상적 경합범, 乙은 폭행죄

- 문 30. 인질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강요를 당하는 자는 인질 혹은 제3자이다
 - ② 친족간의 범행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성년자와 미성년자 모두 인질대상이다
 - ④ 인질을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더라도 처벌된다
 - ⑤ 노조간부에 대한 고발취소 및 석방을 요구하며 사장을 인질로 삼은 경우에도 성립한다
- 문 31.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대나무를 심은 자가 베어간 경우
 - ② 타인의 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 ③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 ④ 타인의 오토바이를 2시간 동안 무단으로 사용하고 반환한 경우
 - ⑤ 운행중인 지하철 전동차 선반 위에 승객이 잇고 가버린 가방을 가져간 경우
- 문 32. 乙은 2001년 2월 1일 丙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甲과의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이에 따라 甲이 매수인이 되어 직접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乙의 자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바로 甲의 명의로 하였다. 매도인 丙은 이 때 甲, 乙간의 명의신탁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 후 甲은 임의로 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한 후 그 대금을 乙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甲의 죄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 ②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④ 매매대금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⑤ 부동산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 문 33. 甲이 칼로 乙을 위협하여 乙로부터 약속어음 한 장을 빼앗았으나 그 어음은 乙이 타인으로부터 강취한 것으로서 부도기업이 발행한 것이었다. 甲의 형사책임은?
- ① 장물취득죄
 - ② 특수강도죄
 - ③ 특수폭행죄
 - ④ 특수강도죄의 불능미수범
 - ⑤ 강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 문 34.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ㄱ.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ㄴ.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ㄷ.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ㄹ.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ㅁ.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ㅂ.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① ㄷ, ㄹ, ㅁ
 - ② ㄴ, ㅁ
 - ③ ㄴ, ㄷ, ㄹ
 - ④ ㄹ, ㅁ, ㅂ
 - ⑤ ㄱ, ㄴ, ㄷ, ㅂ

문 35. 甲은 乙이 훔친 자동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乙의 강도제외에 따라 乙을 태우고 운전을 하여 함께 강탈 대상자에게 접근 하던 중 경찰관의 검문에 의하여 검거되었다. 甲의 죄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① 강도예비죄
- ② 장물취득죄의 공범
- ③ 장물운반죄의 공범
- ④ 강도예비죄와 장물취득죄의 상상적 경합범
- ⑤ 강도예비죄와 장물운반죄의 상상적 경합범

문 36. 컴퓨터 관련범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에서 단말기를 사용하여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잔고를 증액시킨 경우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②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사기죄와 달리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이득죄이다
- ③ 컴퓨터 해킹행위를 통하여 타인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을 알아냈을 경우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
- ④ 컴퓨터 바이러스를 유포하여 타인의 업무에 관한 전자기록을 삭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⑤ 컴퓨터 등에 수록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7.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차장 관리인에게 흥기를 들이대면서 살해위협을 하여 보관중인 승용차 열쇠를 빼앗아 차를 훔쳐간 경우
- ② 사기죄로 기소된 처에 대한 재판에서 처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도록 남편이 증인에게 부탁하여 실현시킨 경우
- ③ 부하폭력조직원을 사주하여 변심한 다른 부하조직원을 상해하게 한 경우
- ④ 장난 삼아 빈충이라고 친구를 기망하여 사냥용 총을 격발하게 한 결과 우연히 지나가던 사람에게 명중하여 사망하게 된 경우
- ⑤ 국내의 특정인에게 전달해 달라면서 여행객을 기망하여 선물처럼 포장한 마약을 김포공항을 통해 반입시킨 경우

문 38.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채무자가 채권의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계속 보관중인 동산을 변제기 전에 임의로 처분한 경우
- ②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한 후 제3자에게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 이를 말소한 경우
- ③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월불입금을 모두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④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수입물품을 신용장대금 변제 전에 보세창고업자로부터 인도받아 임의 처분한 경우
- ⑤ 양도담보권자가 변제기 경과 후에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면서 시가보다 헐값에 매도한 경우

문 39. 판례에 의할 경우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은?

- ① 타인의 주민등록증사본의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여 제출하는 행위 (공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
- ② 사자명의로 사문서를 작성하면서 그 작성일자를 생존 중의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
- ③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

- ④ 명의인을 기망하여 그 내용을 오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의 의사와 다른 내용의 사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사문서 위조죄)
- ⑤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혐의로 수배중인 자가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한 경우 (증거인멸교사죄)

문 40. 甲은 카바레에서 만난 유부녀 乙을 여관으로 유인하여 강간하면서 가위로 乙의 음모 끝을 일부 잘라버렸으며 이를 남편 丙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해 돈을 요구하였다. 겁을 먹은 乙은 자신의 현금카드를 甲에게 주고 비밀번호도 알려 주어 돈을 찾아 쓰게 하였고, 甲은 은행현금자동지급기에서 70만원을 인출해 사용하였다. 乙은 甲의 계속되는 위협에 못 이겨 계금을 타면 값을 생각으로 丁으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甲에게 주었다. 乙은 그 후 계금을 타서 탕진하고 달리 재산도 없으면서 丙의 인장과 등기권리증을 몰래 가지고 나와 丁의 집에서 丙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증과 함께 丁에게 주고 계금을 탈 때까지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하였고, 丁은 이를 믿고 변제기를 연장해 주어, 乙은 기한유예의 이익을 받았다. 乙은 丙의 인장을 바로 제자리에 갖다 두었으나 등기권리증이 없어진 것을 수상히 여긴 丙에게 들켜 혐의이혼을 하고 무일푼이 되었다. 甲과 乙의 형법상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을 강간하고 음모 끝을 일부 잘라버린 행위는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
- ② 甲이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취득한 일련의 행위는 공갈죄가 될 뿐이고 인출한 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절도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乙이 丙의 인장과 등기권리증을 가져간 행위는 인장 및 등기권리증의 절도죄에 해당하나 친족상도례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 ④ 乙이 丙 명의의 각서를 작성하여 丁에게 준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 및 동행사죄의 실제적 경합범이다
- ⑤ 乙이 丁으로부터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된다